

企劃論文

우리 정치학 실천의 방안: 문제와 국제정치학의 예

김 영 명*

I. 지금의 문제	V. 주변부 시각의 기본 전제
II. 실천의 방안	VI. 문제 영역
III. 국제정치 연구의 현황	
IV. 한국 국제정치학의 출발점- 주변부 시 각에서 출발, 한국의 특수성으로 심화	

최근 우리 학계에서는 서양에 대한 학문적 종속성을 극복하고 한국 고유의 학문을 일구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로 정치학과 철학 쪽에서 이러한 반성과 모색의 기운이 높는데, 이는 세계적 차원의 관계에 관심을 쏟는 정치학과 말과 사고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철학의 학문적 성격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모색의 성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못하지만, 점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학에 대한 모색은 주로 서양 종속성에 대한 지적과 문제 제기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학에서는 우리말 학문의 구체적인 모색을 이미 시작하였고, 문학 쪽에서도 한국적 시각에서 세계 문학사를 다시 쓰는 야심적인 작업을 보이는데, 정치학에서는 이런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¹⁾

* 한림대학교 교수, 정치외교전공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 입각하여, 상황이 왜 이런가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 해석해 보고, 뒤이어 우리 정치학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한 보기를 제시하고자 한다.²⁾

I. 지금의 문제

한국의 정치학이 고유성을 갖지 못하고 서양, 특히 미국 정치학의 아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은 실상 벌써 30년 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³⁾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치학을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도 같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그 뒤에도 같은 종류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아니 잇을 만하면 한 번씩, 우수한 정치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 효시는 문승익 교수이다. 그는 이미 1975년에 우리 정치학의 미국 종속성을 비판하고 ‘자아준거적’ 정치학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 이러한 문제 제

- 1) 이기상 교수 중심으로 2001년 ‘우리말로 학문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반년간 『사이』 지를 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같은 교수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우리 사상 연구소 편, 『우리말 철학 사전』 1, 2, 지식산업사(2001, 2002)와 조동일, 『세계 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2002)를 참조하시오.
- 2) 우리 식 정치학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 정치학’, ‘자아 준거적 정치학’ 등도 가능하다. 단 한국 정치학은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오해될 수 있다. 무난해 보이거나 아무래도 우리의 뜻을 담기에는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느낌을 준다. 자아준거적 정치학은 너무 한문투라 시대에 맞지 않고 한국의 주체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줄 안다. 그 반면 우리 정치학은 기존의 학문적 어감과 별로 맞지 않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해 별로 학문스럽지 못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고유의 학문을 진작해야 한다는 취지에 더 맞는 용어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 정치학이라는 말이 가지는 또 하나 문제는 지나치게 폐쇄적 또는 국수주의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쓰고 이것이 개인주의의 부족과 대외적 개방성의 부족을 표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필자는 다른 두 용어보다는 우리 정치학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선택했다.
- 3) 1970년대의 청년문화론부터 시작하여 우리 지성계를 풍미한 여러 담론들, 곧 탈근대주의-자유주의, 세계화, 민족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등등에서 같은 문제점이 보인다.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서 나온 이론들을 분별없이 우리 사회에 적용하려는 시도의 문제점이다. 이런 현실은 비단 서구 이론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종속이론, 관료적 권위주의론 등 제3세계 이론들의 도입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였다.
- 4) 문승익, 「자아준거적 정치학: 그 모색을 위한 제안」, 『국제정치논총』 제13, 14집(1975) ; 「한국 정

기는 그 뒤 큰 뒷받침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한국 정치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식으로 간단없이 나타났다. 그러다가 특히 최근에 와서 한국 정치학의 서양 종속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들이 나타났다. 강정인의 서양중심주의 비판, 김명섭의 국제정치학의 제국주의적 성격 비판, 김웅진의 방법론의 패권주의성 비판과 우리말 정치학 제언, 홍성민의 서양적 아비투스⁵⁾와 학술정치 비판, 김석근의 한국적 정치사상 제언 등이다. 이들의 분석은 한국정치학의 흐름에 대한 단순한 개관이 아니라 문제의 소재를 적절히 파악하고 그것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문승익이 보인 초기 단계의 문제 제기를 더 깊고 기쁨지게 만든 값진 성과들이다. 최소한 이들은 지금의 한국 정치학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왜 우리 정치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국제 정치에 대한 우리 시각을 모색하는 본격적인 연구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용구 교수의 외교사 연구나 필자의 세계화와 민족주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⁶⁾ 앞으로 이런 문제의식의 연구 성과들이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업적들이 본격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즉, 문제의 성격은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

치학 정립의 문제: 정치 이론의 경우, 『한국정치학회보』 제13집(1979). 모두 같은 저자의 『자아준거적 정치학의 모색』, 오름 (1999)에 실렸음.

5) 강정인,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과 국제 정치』 제16집 1호(2000); 김명섭, 「제국 정치학과 국제 정치학: 한국적 국제 정치학을 위한 모색」, 『세계정치연구』 제1권 1호(2001); 김웅진, 「신화와 성화: 과학방법론의 패권 정치」, 전예원(2001); 홍성민, 「한국 정치학의 정체성과 학자들의 아비투스」, 한국정치학회 기획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0); 김석근, 「주변부 지식인의 허위의식과 자기 정체성」,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정치학: 현황과 전망』, 법문사(1997); 정윤재, 「자아준거적 정치학'과 한국 정치 사상 연구: 문제 해결적 접근의 탐색」, 정윤재 외, 『한국 정치사상의 비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9).

이 문제에 관한 필자의 글은 「한글 사회과학의 모색」 (위 한국정치학회 기획 학술회의 발표 논문)을 바탕으로, 이 논문을 확대하여 김영명, 『나는 고발한다』, 한겨레신문사(2000)의 제2부 「우리 삶, 우리 눈, 우리 글」로 실었고, 발표 논문의 후반부는 「한글 사회과학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3권 2호 (2000 여름)에 실었다.

6)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학과 지성사(2001); 김영명,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오름(2002).

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문제 제기가 있는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왜 우리 정치학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못한가 하는 점이다. 위에 든 사람들의 문제 제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요약된다. “지금 우리의 정치학은 지나치게 서구 특히 미국의 정치학에 빠져 있다. 서구적 문제 의식에 서구적 방법과 서구적 용어들로 되어 있다. 우리 고유의 문제 의식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고유의 개념, 이론, 방법론을 개발하지 못했다. 이는 서구 학문의 제국주의성 뿐 아니라 국내 학계의 서구 추종적 패권성과 폐쇄성 때문이다. 이를 탈피하여 우리의 독창적인 정치학을 일궈내야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깊게 천착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맨 마지막 논점, 곧 “우리의 독창적인 정치학을 일궈내야 한다”는 점에 와서는 선언적인 결론에 머물러 버린다. 다시 말해 논의가 한 단계 더, 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그 직전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이는 순전히 필자의 상상이나 짐작의 소산이니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기존 정치학의 패권적 지배가 너무 커서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입신해야 하는 학자들로서 감히 ‘범법 과학’⁸⁾을 추구하는 이단아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도 기존 학계나 대학의 이런저런 일상사들이 마음과 몸의 여유를 주지 않는다. 생각은 있고 사명감도 있지만, 실제로 기존의 틀을 깨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

둘째, 기존 학문의 틀이 너무나 완강하고 잘 짜여져 있다. 그 속에서는 수많은 오류나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토의할 수 있겠지만, 바깥에서 이를 통째로 부정하고 새로운 학문 체계를 열겠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상황에서 김웅진은 “‘우리말 방법론’의 정립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우려했다.⁹⁾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아니다.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지면 가능한 길을 찾으면 된다. 철용성을 공략하려고 하지 말고 약한 고리를 치는 것이다. 그

7) 홍성민, 위 글 참조.

8) 김웅진, 위 책, 제2장. 김웅진은 서구 방법론의 보편타당성을 부인한다. 특정사회의 폐쇄적 과학 이데올로기를 반영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홍성민의 견해와 통한다.

9) 김웅진, 위 책, 150쪽.

리고 그 성 자체를 통제로 삼기려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다. 반미주의자가 미국이 아무리 미워도 미국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꿈을 꾸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해야 할 것은 미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되도록 대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미국과 서양의 정치학을 몽땅 대체하는 새로운 한국 정치학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학문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선진 정치학의 보편적인 부분을 받아들여, 우리 고유의 문체와 방법과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 이를 위해 서양 학문을 때로는 이용하고 때로는 배척해야 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서양 학문의 어느 부분은 수용·이용하고, 다른 부분은 우리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돌린다.¹⁰⁾

셋째, 위의 사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서양·미국의 정치학 발전이나 세련화의 정도가 너무 높아 우리가 과연 이런 정도의 독자적 학문을 이룰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이 우리 정치학 시도의 기를 꺾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문도 잘못된 의문이다. 우리는 단시일 안에 미국 정치학의 수준에 도달하는 우리 정치학을 만들 수 없다. 이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만약 우리 정치학을 정말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존 (한국)학계의 온갖 비웃음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들의 (아니 그들이 추종하는 미국의) 높은 학문적 수준으로 보면, 처음 시작하는 우리 정치학은 허점 투성이의 원시적 가공물일 뿐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이 비웃으면 우리는 그들의 의존성과 모방성을 같이 비웃어 주면 된다.

학문의 수준은 정교함, 엄밀성, 세련화의 정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독창성과 현실적합성(적실성)도 있다. 필자는 이를 이미 다른 글에서 밝혔다.¹¹⁾ 지금 당장 우리가 독창성과 주체성, 적실성에 중점을 두면 엄밀성과 세련성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남들이 다 깎아준 장검의 날을 가는 일과 내가 손수 내 도끼를 만드는 일 중 어느 것이 더 세련되게 비치겠는가? 전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옷 차려입고 남의 칼에 금박 입히는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무명

10) 김영명, 위 책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진다.

11) 위 책 참조.

적삼 걸치고 또는 해진 예비군복 입고 제 칼 만들겠다고 꿈꾸대는 것도 보람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번쩍번쩍한 금 손잡이 칼을 만들 수도 있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은 있다. 아예 시작하지 않으면 확률은 0이다.

넷째, 필자가 느끼는 한 중요한 문제(또는 의심?)를 말하고 싶다. 우리 정치학을 주장하는 사람들마저 어떤 면에서는 서양 정치학의 마법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우리 정치학을 주장하면서도 학문 성과의 기준을 서양 학문에다 두고 서양적인 언어를 통해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¹²⁾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 이는 서양적 지성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의 글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우선 이들의 글은 상당히 어렵다. 물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읽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다. 그러면 왜 이들의 글이 어려울까? 한 가지는 글의 내용이 상당히 철학적 또는 과학철학적이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글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내 의심이다. 이들 역시 서양적 시각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지 못한 결과, 서양 지성의 틀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들은 우리 학문을 주장하면서도 서양 학문의 높은 성취에서 낙오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서양 학문의 지배를 공격하면서도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 학계의 대외의존성, 주류 패권성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타개할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는 순전히 나의 짐작일 뿐이므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항의와 비판을 감수하겠다. 그리고 이런 내 말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이론 성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우리 정치학은, 미국 정치학이 그랬던 것처럼, 초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를 겁내고 미국 또는 학문 선진국의 기성 학문 수준을 흉내내려고

12) 서구 이론에 대한 동양적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들, 특히 동양·한국 사상 전공자들은 반대로 지나치게 한문 지향적인 경향을 보인다. 방향은 다르지만 ‘종속성’이란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하면 곤란하다. 이 자체가 서구 종속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눈으로 우리 문제를 보는’ 초보적인 시론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미국 정치학을 기준으로 놓고 이 수준에 이르는 ‘세련된’ 정치 분석을 ‘우리 식’을 하겠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송냥 찾는 꼴이다.

II. 실천의 방안

여기서 나는 우리 정치학의 원시적 출발을 제안한다. ‘원시적’이라는 말에 주목하기 바란다. 우리가 미국 정치학의 세련성을 염두에 두고서는 우리 정치학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시작은 초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초라한 시작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 물꼬를 터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뒤에 후배들이 바닥을 다지고 대들보를 올리고 기둥을 세운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지붕을 얹고 방수공사를 하고 내장재를 붙인다. 또 그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실내장식을 하고 고급 대리석을 깎는다. 능력이 안 되면 소박한 실내 장식으로도 만족할 수도 있겠다. 미국 정치학도 처음에는 소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 끝에, 때로는 정치 현실이, 때로는 이론과 방법론 자체가 정치학이라는 학문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후발국으로서 앞선 미국·서구 정치학의 성과를 이용할 이점이 있다.

그런데, 우리 학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1) 우리의 문제(우리 삶)를, 2) 우리의 눈(시각, 관점)으로, 3) 우리의 말과 글로 연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우리 문제를 우리 눈으로 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말글로 학문하기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른 곳에서 밝힌 대로 가장 초보적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¹³⁾ 외국말과 글을 안 섞어 쓰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쉽지만(마음먹기가 어렵기는 하다), 고유한 우리말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문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13) 김영명, 위 글들 참조.

단계가 성취되면 우리 고유의 학문과 세계관이 확립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스스로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목표에 최대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함도 강조한다.

이보다 더 실현 가능한 방법은 ‘우리 시각’으로 ‘우리 문제’를 연구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말로 하는 학문의 쉬운 판과 어려운 판의 중간에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눈(시각)으로 보자는 것과 우리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자는 것은 분석상 별개이긴 하나 실제로는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이 글에서 필자는 우리 정치학의 고유한 문제와 시각을 탐구하는 한 예를 국제정치학 분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I. 국제정치 연구의 현황

국제정치 분야야말로 강대국의 패권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학문 분야다. 지금의 지역 연구와 국제정치학은 특히 영국·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해 개발된 학문 분야다.¹⁴⁾ 국제정치학을 미국 중심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세계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대국에서 나온 것인 만큼 지금의 국제정치학은 전적으로 강대국 중심적이다.¹⁵⁾ 약소국 시각을 반영한 국제정치학은 한 마디로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¹⁶⁾

그러나 이는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학과 같이 세계 체제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 이론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을 말할 때이지, 부분적인 이론으로서의 상당한 연구 업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속 이론은 일차적으로 국제정치학 이론이라기 보다는 중속 지역의 저발전에 관한 이론이지만, 여기에는 국제정치경제의 구조

14) 김명섭, 위의 글.

15) 최근의 우수한 교과서인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를 참조하시오.

16) 약소국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다룬 거의 유일한 책으로 Michael I. Hand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otowa, NJ: Frank Cass, 1981이 있다. 이 외 약소국이나 중간국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씩 존재할 뿐이다.

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 있다. 탈(반)식민 이론들 역시 (탈)식민 사회에 관한 이론이지만, 이 또한 특정한 국제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서 있다. 이런 이론들은 약소국 또는 주변부에서 나온 이론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의 국제체제에 대해 비판적이다. 따라서 주류 국제정치학과는 이념을 달리 하고, 주류 국제정치학의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국제정치학을 옮기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경우를 덧붙일 뿐이다.¹⁷⁾ 미국 국제정치학의 최신판을 소개하는 것을 여전히 학문적 성취의 척도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은 국제 정치 체제 전체에 대한 이론과 국가이든 비국가이든 정치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 주요 영역에 관한 수많은 이론들이 경쟁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그 경쟁의 복잡한 과정이 어떠한 간에 이들은 모두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반영하거나 미국인들의 가치관이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보수적이든 급진적이든 전통적이든 탈근대적이든, 이들 모두가 미국 (또는 경우에 따라 영국과 유럽 나라들) - 그 국가와 시민의 이익이나 관심을 반영하고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강대국, 또는 초강대국 (그리고 그 국민)으로서의 이익과 관심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소국, 중간국, 주변국, 후진국, 중진국의 이익과 관심사에 무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 즉 분단 상황과 한미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지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점에서 많은 연구를 해 왔다. 그러나 ‘한국 문제’에 관한 관심이 일차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이 얼마나 한국적인 ‘시각’의 연구로 결실을 맺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많은 경우 비학술적 또는 준학술적인 논의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17)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 교과서로는 이상우·하영선 편, 『현대 국제정치학』, 나남 출판(2000).

IV. 한국 국제정치학의 출발점- 주변부 시각에서 출발, 한국의 특수성으로 심화

한국 국제정치학은 세계정치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체제에서 주변부 또는 약소국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둘은 편의에 따라 교차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을 더 세밀하게 본다면 준주변부, 중간국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으로 볼 때, 어느 쪽으로 규정하든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지금까지의 국제정치학이 중심부에서 본 것이었다면, 한국 국제정치학은 주변부에서 본 세계정치 연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중심-주변부 구분은 종속이론, 권역이론, 세계체제론 등에서 나왔다. 그러나 반드시 이들의 이론적, 사상적 기반을 따를 필요는 없다. 같은 중심-주변부론이라도 그 이념적 기반은 현실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주변부 이론의 이념적 기반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 단지 마르크스주의 또는 급진 이론이 주변부 이론에 가까운 관심을 더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국제정치학은 주변부 시각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분단-냉전 상황의 문제,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준주변부 중간국의 위치 등을 말한다. 이런 위치에 있는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쟁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거친 밑그림을 그려보기로 한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한국적 시각의 전문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V. 주변부 시각의 기본 전제

국제정치학에는 세계 전체의 구조를 보는 강대국 국제정치론 외에 약소국의 입장에서 약소국과 강대국의 관계, 약소국과 약소국의 관계를 파악하는 약소국 국제정치론이 필요하다. 세계 정치의 구조는 강대국끼리 힘의 각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유력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끼어 든다. 그러나 이들 역시 대부분 강대국에

서 유래한다.

그 결과 기존의 국제정치론은 강대국 중심의 시각이고, 강대국 사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변부의 문제는 강대국의 안보나 이익에 큰 영향을 안 주므로 거의 무시했다. 세계 정치의 구조에 약소국은 행위자로 들어가 있지 않다. 이 구조 속에서 약소국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루었으나, 약소국-주변부의 입장에서 세계 정치 전체를 본 것은 없다. 약소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정치는 **강대국들이 세력 다툼 하는 과정에서 약소국을 압박, 침탈 또는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소국 국제정치론은 약소국과 강대국의 관계, 그 구조, 그 변화, 이들 사이에서의 생존과 발전 전략, 또 약소국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계 정치는 강대국들 사이의 관계가 지배하고 주변부-중심부 관계와 주변부-주변부 관계는 종속적이거나 주변적이다. 그러나 주변부에게는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강대국끼리 벌어지는 힘의 각축과 그로 인한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는 부차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이에 대해서는 강대국 국제정치론의 성과를 이용하면 된다.

VI. 문제 영역

1. 국제정치의 구조

기존 국제정치학에서 제시하는 양극 체제, 다극체제 등 세계 체제의 구분은 강대국 위주의 구분이다. 이런 일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되, 약소국과 강대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양극 체제는 ‘동서 동맹 체제’로, 다극 체제는 ‘다양한 협조-대립 체제’로 다시 개념화할 수 있다. 또, 세계화는 ‘서양화·미국화’로,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지배 체제’ 등으로 바꾸어 인식하게 된다.

2. 세계 정치의 변화와 주변부의 위치, 쟁점, 전략

냉전: 냉전 시대에는 주변부 국가들이 동서 두 진영으로 편입을 강요받았다. 특

히 미-소 양국에 인접한 동유럽과 중남미 지역은 각 패권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또 동서 진영들이 직접 만나는 지역이나 이념적 분쟁 지역에서는 각 진영의 보루로서 군사적 대결이 첨예하였다. 이들 지역 역시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한반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진영간의 각축이 있었지만 대체로 미국 중심의 서방권에 속하였다. 이러한 두 진영에의 편입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한 것이 아시아-아프리카의 비동맹 중립 운동이었는데,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나라들은 위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에 있었다.

탈냉전: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세계는 자본주의 지배체제로 변하였다. 미국과 소련이 각축하던 양극체제가 미국의 일방적 패권 체제로 변하고 이에 중국과 유럽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도전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냉전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사라지자, 미국은 대테러 전쟁을 빌미로 세계 각 지역에 개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에 이르렀다. 제3세계의 비동맹 운동도 의미가 사라지고, 이 나라들은 미국-서구의 동맹체제에 참여하느냐 독자적인 노선을 걷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나라들은 테러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의 직간접적 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라크가 앞의 경우에 속하고 북한과 쿠바가 뒤의 경우에서 대표적이다. 주변부 국가들이 독자 노선을 추구하기는 냉전 시대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 미국의 패권 확장과 내정 간섭,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직접 침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세계화: 세계화는 궁극적으로 ‘초국적’ 자본(그러나 실제로는 강대국 자본)의 세계적 팽창을 일컫는다. 이와 더불어 서양적 특히 미국적 가치, 문화, 제도들의 세계적 팽창을 포함한다. 세계화의 동력은 선진국 자본, 특히 금융자본의 전지구적 팽창력이며, 또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 팽창력이다. 주변부들은 이러한 자본과 문물의 침투를 강요당한다.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세계적 발전에서 뒤쳐지고 이에 호응하면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대체로 세계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어 주변부 엘리트들도 이에 적극 호응한다. 그 결과 세계 경제와 문화는 점점 ‘일체화’되어 가며, 국내외의 빈부 격차가 증가하고,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의 확장으로 지구환

경이 훼손되어 간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힘의 격차도 점점 확대되어 간다.

정보화: 정보화의 확대는 세계를 점점 더 좁게 만든다. 세계화의 한 중요한 기술적 측면이 정보화이다. 정보화를 통해 세계화가 심화되는 점에서 정보화는 세계화가 가진 장단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보화 고유의 문제들도 존재한다. 정보를 온 세상 사람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어 불평등의 감소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경제적 참여를 쉽게 하는 반면, 정보 격차 때문에 오는 권력과 부의 집중 현상이 새로운 문젯거리로 대두된다. 또 개인 정보의 유출에 따른 권력의 개인에 대한 감시 문제도 대두된다. 이러한 상황이 주변부 국가와 주민들의 위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탐구의 대상이다.

비국가 행위자들의 대두: 비국가 행위자들의 힘과 세계 정치에의 참여는 점점 더 커진다. 이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급격히 강화되었다. 우선 초국적 기업들이 각국 정부의 정책 결정과 세계 정치경제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국제 금융기구들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또 유럽연합 등 초국가 정치기구들이 국민국가의 역할을 대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국가 안에서의 지방화의 진전 또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국기를 넘어서 각 나라들의 지방들을 연결하는 ‘지방세계화’도 증가한다. 여러 종류의 국내외적 시민단체들, 민간기구들의 역할도 증대한다. 국가를 초월하는 시민들간 연대가 점점 더 큰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모든 측면에서 일어나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 증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구구하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라고 하더라도 국민국가의 역할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뿐더러 그것은 단일 행위자로서는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을 행사한다. 이런 상황이 주변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초국적 기업들과 금융기구들의 세력 확장은 주변부국가들의 경제 정책의 자율성을 줄이고 대외 종속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민 국가로 세계가 구획되었을 때보다는 행동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다양한 관계가 중요해질 때 국가의 능력 위주로 짜여지는 세계 정치의 지도와 행동 범위보다는 숨실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주변부 행위자들에게는 이런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3. 주변국들의 생존과 소멸 또는 발전에 관한 비교역사적 연구의 필요성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강대국 국제정치론에는 이 분야가 없다. 주변부 국제정치학의 몫이다. 한국 국제정치학에서 이를 담당하여 한국의 생존과 발전, 국제적 위상의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주변부의 생존과 이익 추구를 위한 전략 - 주변부에 특수한 영역들

자립: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동맹이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 노선을 채택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소국의 빈약한 자원과 자본, 뒤떨어진 사회적 조건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다. 특히 강대국이 현실적 이해를 가지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간섭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강대국들의 각축 속에서 어느 한 쪽에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고 적당한 지원을 얻어내면 약간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중립: 강대국들이 각축전을 벌일 때 어느 한 쪽에도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각각에서 이익을 얻어내려는 전략이다. 문제는 강대국들의 불신과 분노로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위력이나 강대국들의 집단적 보장, 또는 약소국들의 집단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중립은 유지하기 힘들다.

동맹: 동맹은 중립의 반대다. 약소국의 경우 동맹의 상대자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 강대국의 압력이나 영향 아래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동맹을 맺게 된다. 남한이 미국과 북한이 소련과 동맹을 맺은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단지 언제 어떻게 맺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 약소국과 강대국이 맺는 동맹은 불균등한 것이다. 국방을 강대국에게 의지하고 그 대신 주권의 약화를 감수하여야 한다. 그 손익계산을 잘 하는 것이 약소국이 할 일이다.

고슴도치, 벼랑끝 외교, 핵무장: 전체적인 군사력이나 국력으로 강대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약소국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협박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북한의 최근 전략이 이에 속하는데,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협박은 그 약효가 지속되기 힘들다는 데 고민이 있다.

다자 외교: 어느 한 국가에 일방적으로 기대지 않고 여러 강대국이나 지역들과 외교의 범위와 종류를 넓힘으로써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지는 전략이다. 그러나 핵심 상위 동맹국이 있을 경우 이것이 쉽지 않고, 그 상위 동맹국의 응징이 따를 수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약소국들은 기본적으로 다자 외교를 통해 활동 공간을 넓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끼리의 연대: 위에서 본 비동맹 외교나 동남아의 아세안과 같은 지역협력 기구들을 통하여 주변국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강대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하지 않고 약소국의 집단 행동으로 협상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사대주의: 강대국, 특히 식민 모국이나 이전 점령국과의 지배-복종 관계 또는 후원-피후원 관계를 통하여 약소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그 경우 물질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정치·경제·문화적 연속과 국내 불평등 구조의 정착을 초래한다.

전쟁: 강대국 뿐 아니라 약소국에게도 전쟁은 국가이익 추구의 한 방법이다. 약소국끼리의 전쟁, 좀더 강한 약소국이 더 약한 소국을 침공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강대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지역 협력-지역 통합: 위 ‘주변국끼리의 연대’와 비슷하나 좀더 제도적이고 공식적이다. 아세안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지역협력이나 통합은 반드시 주변국 사이가 아니라 중심과 주변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북미무역협정이나 종종 거론되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제 구상이 이에 해당한다.

국제 기구, 국제법 활용: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힘이 약한 쪽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약소국은 국제 사회에서 힘의 지배를 되도록 줄이고 법과 도덕의 구실을 더 높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강대국이 좌우하거나 그들의 이익에 위배될 때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이 장치들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연합이나 그 산하 유네스코, 도쿄환경협약 등 여러 제도들을 볼 때 강대국에게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5. 보편적 영역에 대한 주변부적 시각

위 항에서 다룬 문제 영역들은 주변부에 독특한 문제들이라 강대국 국제정치론에서 찾기 힘든 것들이었다. 이 밖에 강대국 국제정치론이 자주 다루는 쟁점들을 주변부 시각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핵 확산: 핵 확산의 방지는 인류 전체의 과제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우선, 핵 확산 방지는 핵 폐기와 다르다. 핵 위험을 진정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핵을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무기의 축소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핵 보유국의 축소 노력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확산 방지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기득권 나라의 이기주의를 반영한다. 이미 가진 나라들의 핵을 축소하지 않고 보유 가능국의 보유를 막으려는 강대국들의 합이다. 그들의 노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그들 자신이 핵을 완전 동결하거나 감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직접 공격할 명분이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강대국의 힘의 행사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핵 보유국에게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여 핵무기 축소의 목표와 협상 과정에 유리한 조건을 따내야 한다.

환경 규제: 환경 규제도 마찬가지다. 지금껏 세계의 환경을 가장 파괴한 나라는 미국이다. 다음을 아마 소련과 중국이 이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환경을 마음껏 파괴해 놓고 더 이상의 파괴가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게 되자 후진국들에게 환경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환경 규제를 후진국에게 강요하려면 지금껏 자신들이 자행한 환경 파괴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 부담금을 후진국들보다 훨씬 더 많이 물어야 할 뿐 아니라 후진국의 산업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환경 규제의 비용을 일부 충당해 주어야 한다. 주변국들은 중심국들에게 이런 요구를 내놓고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자유주의와 보호주의: 세계 무역이나 기타 경제 관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선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자유 무역을 통하여 이득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 산업의 발전을 보기 힘들다. 선진국이 자유 무역을 주장하려면 우선 자신들부터 이를 지켜야 한다. 자유 무역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미국이 가장 발달

된 경제임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유 무역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양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경쟁력이 없는 산업 분야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 식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경제의 앞선 정도에 따라 정책의 종류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주변국은 자신의 산업 보호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자유 무역과 보호무역 사이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도덕적 개입: 강대국은 자신의 가치관을 토대로 약소국에게 개입한다. 미국이 인권을 내세워 약소국에 간섭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스니아 사태, 앙골라 사태 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미국은 인권 보호를 내세웠다. 강대국인 중국에 대한 인권 간섭도 계속된다. 이런 현상은 탈냉전 이후 가속화되었고, 도덕적 개입의 문제는 최근 미국 국제정치학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도덕적 개입은 자국의 이익 추구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아무리 인권 유린이 자행되어도 미국은 자신의 이익이 걸리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서 보듯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독재 정권들을 돕고 인권을 신장하는 좌파 정권들을 붕괴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도덕적 개입을 도덕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한국의 독재 정권이 인권 탄압을 자행할 때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거나 묵인해야 할 것인가? 이는 한국의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이에 대한 학문적 토의를 준비해야 한다.

전쟁: 약소국에게 전쟁은 많은 경우 강대국 패권 다툼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파괴, 살상일 뿐이다. 이른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쟁에 끌려들거나 침공을 받아 피해를 얻는 일이 허다하다. 물론 약소국끼리의 전쟁에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오히려 소수이다.

평화, 질서, 평등: 평화는 소극적으로는 ‘전쟁 없는 상태’이고 적극적으로는 사람간 우애의 유지다. 그러나 약소국에게 평화는 많은 경우 강대국에 대한 복종의 지속이다. 이에 반항하는 것은 국제질서를 어기는 것으로 응징 받는다. 이른바 ‘수정주의’ 국가들은 세계 평화를 해치는 존재로 매도된다. 그러나 복종의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질서에 대한 도전은 분쟁을 일으켜 평화를 해칠 수도 있지만 덜한 불평등에 바탕을 둔 더 나은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다.

세계화와 민족주의: 약소국의 눈에서 볼 때, 세계화는 강대국 자본의 세계화이며 미국의 패권 확대다. 세계화는 국가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지구 전체의 생산력을 올릴지 모르나 약소국에게 반드시 유리한지는 의문이다. 세계화는 자본의 집중을 통하여 약소국과 강대국간의 격차를 더 확대한다. 세계화는 국경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민족주의를 더 부추기기도 한다. 민족주의의 부활은 세계 평화에 위협을 주지만 동시에 피압박 민족의 자결을 돕는다. 민족 정체성의 확보는 세계화 시대에 약소민족이 추구하는 본능적 명제다. 따라서 강대국과는 달리 약소국으로서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세계 정부: 세계 정부의 수립을 통한 평화와 질서의 확립은 많은 국제정치사상가들의 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약소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도 문제다. 세계 정부의 관리자는 결국 강대국 출신 인사들일테고, 그들과 약소 지역 주민들과의 격차가 결코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지배-복종의 관계가 확립되고 그것은 민족국가로 나누어져 있을 때보다 더 강고해질 것이다.

국제법: 국제법도 약소국보다는 강대국에게 더 유리하다. 국제 법정의 주류 인사가들이 강대국 사람들이고 강대국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강대국들은 자신의 이익에 위배될 때 국제법을 무시하고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약소국은 국제법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작은 힘을 이런 법으로 보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6. 한국의 특수성과 외교 전략

한국에 특수한 국제정치의 문제들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① 분단과 전쟁, 냉전
- ② 대북 협력과 통일의 과제
- ③ 한미동맹의 특수성
- ④ 4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수성
- ⑤ 중화사대주의의 역사
- ⑥ 선진 자본주의로의 진입 등

이런 문제들을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지금까지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국제)정치학의 한국적 특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우리 고유의 시각으로 다루었는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미국 중심 서양 학자들의 개념과 이론에 바탕을 두고, 심지어 서양적·강대국적 시각에 입각한 경우들이 많았다.¹⁸⁾ 이에 대해 더 분명히 한국적인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7. 방법: 서구 이론과 우리 정치학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립을 위해 세계 정치의 보편 영역을 이해하고 기존의 국제정치학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주의론, 자유주의론, 마르크스주의론, ‘성찰’ 이론, 구성주의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미국 국제정치학의 시각들을 검토하고, 어느 것이 한국(주변부) 국제정치학에 더 유용한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중 서구적·미국적 특수성과 편견을 배제하고, 강대국끼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학문적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

이들을 이용하면서 주변부 시각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은 주변부적인 시각도 이들처럼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위의 시각들 중 현실주의보다는 자유주의, 성찰이론 등이 주변부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덜 부적합할 수 있다. 이들은

18) 한 중요한 보기로, ‘한국 전쟁’이라는 용어를 들 수 있다. 이전에 ‘6.25 사변’ 또는 ‘6.25 동란’으로 부르던 것을 더 학술적이고 국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여 언제부터인가 ‘한국 전쟁’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사변이나 동란이 본격적인 전쟁의 느낌을 주지 않고 국지적인 변란의 느낌을 준다고 하여 전쟁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것이 ‘한국’ 전쟁이 된 것은 문제가 크다. 그것은 사고의 대외의존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촉발한 전쟁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미국 사람들이 ‘남북 전쟁’을 ‘미국 내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상하다.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한국에서 일어났으니 한국 전쟁이겠지만, 우리에게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 또 하나, 한국 전쟁이라는 말이 공식화된 데에는 1980년대 후반 전쟁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이 활개를 칠 때 그 지적 바탕이 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정말 제대로 된 번역이 되려면 그것도 『한국 전쟁의 기원』이 아니라 『6.25전쟁의 기원』이거나 다른 용어로 썼어야 했으나,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기로 하자. 그러나 한국 전쟁이라는 타인 준거적 용어는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요즘 들어 한국을 부쩍 ‘코리아’ 또는 ‘Korea’라고 말하거나 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의 내전은 그냥 ‘남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자기들끼리의 야구 시합을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다. 제국과 변방의 자연스러운 차이로 치부해버릴 것인가?

국가간 힘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 다양한 행위자들의 다양한 문제 영역에 관심을 두는 반면, 현실주의는 강대국끼리의 힘의 관계에만 관심을 두므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현실주의적 힘의 관계가 여전히 세계 정치를 지배하고 약소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므로 현실주의적 시각이 여전히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지배체제를 비판하므로 주변부에 동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내부적 차이가 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주변부를 무시한다. 제국주의론은 중심부에 대한 연구이며, 세계체제론은 세계 전체의 구조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주변부 이론으로 직접 사용될 수 없다. 이에 비해 주변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종속이론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국제정치학의 정립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주변부 국제정치학은 태부족하여 활용할 것이 별로 없는 형편이다. 관련되는 것은 종속이론과 이와 관련된 제국주의론, 세계체제론, 그리고 약소국·중간국 외교에 관한 연구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학이 얼마만큼 ‘우리의’ 학문이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서양 정치학의 성과를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 정치학은 미국 정치학과 완전히 다른 독특한 정치학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사실 모든 다른 현상과 마찬가지로 정치 현상에도 ‘보편적’인 것들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흥미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 또, 한국에 고유한 현상이라도 외국의 이론을 대입해 볼 수도 있다. 반드시 적실성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다. 문제는 어떻게 한국의 특수성을 포착하고 해결할 독창적인 시각과 이론을 정립하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데, 다른 기회로 넘긴다.¹⁹⁾ 간단히 요점만 말하자면, 서양 국제정치학에 없는 획기적인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론을 찾는 것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비현실적이다. 그것은 한참 뒤의 과제다. 그보다는 주변부·한국의 위치와 문제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관된 세계관과 분석틀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19) 필자의 앞선 글에서 상당 부분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국문>

- 강정인.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과 국제 정치』 제 16집 1호, 2000 봄·여름.
- 김명섭. 「제국 정치학과 국제 정치학: 한국적 국제 정치학을 위한 모색」, 『세계정치연구』제1권 1호, 2001.
- 김석근. 「주변부 지식인의 허위의식과 자기 정체성」, 한국정치학회편, 『한국의 정치학: 현황과 전망』, 법문사, 1997.
- 김영명. 『나는 고발한다: 제 2부 “우리 삶, 우리 눈, 우리 글”』, 한겨레신문사, 2000.
- 김영명.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오름, 2002.
- 김영명. 「한글 사회과학을 세우자」, 『정신문화연구』 제 23권 2호, 2000 여름.
-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22』, 문학과 지성사, 2001
- 김웅진. 『신화와 성화: 과학방법론의 패권 정치』, 전예원, 2001
- 문승익. 『자아 준거적 정치학의 모색』, 오름, 1999.
- 우리 사상 연구소 편. 『우리말 철학 사전』 1·2, 지식산업사, 2001·2002.
- 이상우·하영선 편. 『현대 국제정치학』, 나남 출판, 2000.
- 정윤재. 「‘자아준거적 정치학’과 한국 정치 사상 연구: 문제 해결적 접근의 탐색」, 정윤재 외, 『한국 정치사상의 비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조동일. 『세계 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 홍성민. 「한국 정치학의 정체성과 학자들의 아버지투스」, 한국정치학회 기획 학술회의-21세기 한국 정치학의 쟁점과 과제, 발표 논문, 2000.

<영문>

- Handel, Michal I.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otowa, NJ: Frank Cass, 1981.
- Baylis, John and Steve Smith, ed.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주제어

우리 문제, 우리 시각